

여야, 8일 코로나 백신 현안질의·중대재해법 처리

본회의 개최 합의... 합의된 민생법안 20여개 처리키로 백신 수급·방역 문제 질의...중대재해법 이견 많아 '진통'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에 나서고, 코로나 19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반면,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적용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뚜렷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법사위 법안 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며 "(처리 법안)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 내일 최대한 논의해 8일날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첫 입법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으로 시작하겠다"면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법 등 시급한 민생 입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는 정부를 상대로 우리 당에서 강력히 요구한 바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백신 수급과 방역 문제 등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세 번째 논의에 들어갔지만 구체적 쟁점은 여전히 많이 남은 상태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인 이상'인 경우로 하고, 처벌 대상도 정부 의견보다 넓게 잡았다. 다른 쟁점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의 전체 조항 중 절반도 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지역형의 하한선을 정하고, 벌금형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은 원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형을 단순 합산하거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는 규정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협치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내일 부동산 정책 점검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과 당정협의...재보선 앞 정책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에 따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점검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년차 부동산 정책 기조를 조율한다.

당 관계자는 5일 "새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부동산 정책에 새로운 접근이 있지 않겠나"라며 "시장에 이러한 시그널을 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선거뿐 아니라 당도 어렵다. 변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9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 장관이 김현미 전 장관과 얼마나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느냐가 여론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변 장관의 '첫 작품'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정책을 실무선에서 논의해본 뒤 총분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일단 7일로 잡혀있는 당정 협의 일정을 순연, 발표를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희화화되어서는 안 된다.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앞서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설 전에 도심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연립·다가구 등의 개발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구성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이 5일 꾸려졌다. 이날 준비단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단은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총리실에서 일부 실무 인력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장에는 권오중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1급)이 선임됐다. 권 실장은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무수석을 역임하고, 작년년부터는 총리실에서 일하고 있다.

부단장에는 국무조정실 정용욱 국장(2급), 총괄팀장은 박명균 공수처설립준비단 조직행정분과장(부이사관), 대외협력팀장은 국무조정실 조영선 과장(서기관), 인사팀장은 국무총리비서실 김장훈 민정민원행정과장(서기관)을 각각 선임했다.

정 총리 "공직자 설 선물 상한액 한시상향 검토"

농수산업계 '10만→20만원'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추석 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농축수산물 업계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했다.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물 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 기간 한우와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선물 가액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정인이 사건 분노...아동학대방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 미안함을 감출 수 없다. 정부의 입장 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1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하지만 현장개입 및 조사가 한계가 있어 경찰과 공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지자체 등에 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희재,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이를 급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

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